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독교 사회복지적 접근

이만식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회, 다양한 언어와 생활양식, 그리고 다양한 행동양식이 공존하는 사회. 곧 다문화사회는 20세기말 서구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정책적 과제였다. 하지만, 어느 틈엔가 한국 사회 역시 ‘노도처럼 밀려드는 다문화 물결’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불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고 하는 주제는 국가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러면 2011년 현재 한국은 다문화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 중 외국 태생 인구의 비율이 전 국민의 5%를 초과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다문화국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2011년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주민은 180개국에 1,395,077명으로 전체인구 4천977만 명의 2.8%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16,000명이다(법무부, 2011), 이러한 비율은 아직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 평균비율 10.3%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0). 예를 들어, 2007년 기준 주요선진국의 외국태생 인구의 비율을 보면 미국은 12.5%, 캐나다는 20%, 호주는 24%에 이르고 있다(이현정, 2009).

그렇다면 다문화가 오늘날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직까지 통계적 수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도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변화의 급변성’ 때문일 것이다.¹⁾ 우리가 다문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도 전에 다문화는 파도처럼 이 사회에 밀려들어왔다. 우리가 다문화의 정의를 내리기도 전에 UN은 이미 2050년까지 이민자정의 비율이 한국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이현정, 2009). 한국사회의 5분의 1이 다문화 가정인 된다는 예견, 이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닌 우리사회를 향한 명백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한국 사회에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인구구조화적인 변화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유학시절을 보냈던 미국의 뉴욕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정착해서 삶을 나누고 있는 곳이다. 특히 뉴욕의 퀸즈 지역에 위치한 엘머스트라는 동네는 전 세계 150여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 이웃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다문화사회이다. 이곳에서 문화적 다원주의는 다양함과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 이곳에서 다문화는 모든 문화와 양식을 통합하여 하나의 문화로 통일시키는 것도 아니고, 각양각색의 혈통을 마구 섞어 혼합된 혈통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적 다양성과 문화를 인정받고, 그러한 다양성 속에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와 통합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150개가 넘는 언어를 민족별로 사용하면서도 영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다양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다문화 사회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1) 2010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의 증가세는 24.2배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는 ‘다가올 미래’의 의미보다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미래’라고 할 수 있다.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이미 당장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것은 한 마디로 지난 5,00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우리의 정체성, 즉 단군 신화 이래 이 땅에 이어져온 ‘한민족’ 그리고, ‘백의민족’이라는 신화를 깨뜨리는 일을 의미한다. 민족의 건국 신화를 깬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써야할 의무를 우리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것’으로 고정되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의 부여와 불변성의 주장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미래’를 자각하지 못하는 무지에 다름 아니다. (과거에서 기인한) 현재의 어떤 것만이 우리의 것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서, 우리의 것에 현재의 다양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더해나갈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문화의 조화로운 통합과 각각의 문화의 개체적인 특성의 보존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역량을 갖추는 때 21세기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사회, 지식사회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그 어떤 전문직보다 인간과 그들의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자리잡게 된 이유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다문화 가정과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의 원칙 포함)을 살펴본 후에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관점과 목회적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II. 본론

1. 한국의 인구구조,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한 사회는 상이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연령계층의 인구집단으로 구성된다. 한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 경제, 의료, 주택, 금융, 생산, 복지 등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기능에 직접적인 변화를 미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가운영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급격한 고령화 현상과 이에 수반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부담의 증가현상을 들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사회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인구 절대 수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하였다.²⁾ 이러한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저 출산 현상으로 인한 유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³⁾와 맞물려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있다.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980년대 피라미드형에서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뀔 것으로 추정되며, 이

2) 통계청(2009.12), “2008년 생명표”에 따르면 1970년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는 340만 명, 2010년에는 536만 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40년 동안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5.4배 정도 증가하였다.

3) 통계청(2006.11), “장래인구 추계결과”에 따르면 1980년 유년인구 100명에 노인인구 11명 수준이던 것이 2020년에는 68명으로 증가하고, 2016년이 되면 101명으로 되어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며,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유년인구의 4.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 위의 통계청 자료(2006.11)에 의하면 1980년까지 3% 수준에 불과하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 2010년 11%, 2020년 15.6%, 그리고 2050년에는 38.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증가속도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격하고, 심각한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한 인구구조의 총체적 전환은 앞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부양부담이 점차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구체적으로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 619만 명(총인구 대비 73.4%)으로 감소세가 시작되며,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64.4%, 2050년에는 55.1%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부양지수는 2010년 37.2에서 2030년 55.8, 그리고 2050년에는 88.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⁵⁾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 현상으로 직결된다 할 수 있다. 즉 노인인구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부양부담 증가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직결되므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고령사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중공업 분야는 물론 전체 산업분야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현상, 기업의 경쟁력 둔화 등은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단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유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외부인구 유입을 통한 인위적 노동력 부족현상의 해소방안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최상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과 외국인 신부들의 출산에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하기 힘든 사회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이주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 한국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⁶⁾.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5년을 제외하고 1990년 대 중반 이후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월말 법무국 출입국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 중인 취업자격 외국인은 54만6,954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순이다.

또한 2010년 5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67개국에서 온 18만2,000여명으로, 2006년부터 약 4년간 매년 혼인신고 10건 중 1.1건이 국제결혼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2009년 혼인통계결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2만5,142건으로 전체 2009년 전체 결혼건수의 8%를 상회하며, 전체혼인 중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12.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통한 노동력의 확충과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족의 확대에 의한 건강한 다문화사회의 건설은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기본적 생존을 위한 현실적 대안임에 부연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2008년 현대 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명 증가할 때 마다 발생하는 생산증대효과는 연간 1천30만 원이며, 소비증대효과는 510만원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우리사회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⁷⁾

2. 다문화 가정의 정의와 현주소

5) 총부양지수는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부양지수인 유소년부양지수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양지수인 노년부양지수를 합한 수치로 2010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소년부양지수가 22.2, 노년부양지수가 15.0으로 37.2명을 부양할 책임이 있으나, 2050년에는 유소년 부양지수는 16.8로 감소하나, 노년부양지수가 72.0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여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88.8명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에 의해 산출되는데, 전문기술인력, 비전문취업자, 연수취업자, 내향선원, 방문취업자 및 산업연수자가 해당됨.

7)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내국인 근로자의 71.4%에 불과한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8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 사회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최근 들어 혼혈인 가정,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 부르고 있다(이하준, 2010).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그 외에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국내에 이주한 경우,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경우, 1인 가구로 혼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혹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다문화가정은 ‘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들어온 역사를 더듬어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이현정, 2009). 하지만 다문화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총각 구제의 명목으로 중국동포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대상이 동남아 각국으로 확대되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현재 농촌결혼 총건수의 13%가 다문화가정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에 본격화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국가별(혹은 민족별)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검토와 체계화를 시도하게 하여, ‘다문화정책’이라 불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정책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 4월 처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 위원회’에 의해 확정·발표되었고, 『외국인정책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률이 2008년 3월까지 모두 제정되었다. 또한, 정부는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평가 및 범부처 차원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조정·협력을 총괄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여성, 가족·청소년 정책 및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업무를 총괄하고 있다.⁸⁾

2010년 9월 정부는 ‘3대 시민희망 핵심과제’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선정하고, 2011년 다문화가족사업 정부예산을 2010년 대비 266억 원 증액된 860억 원을 편성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도, 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언어교육 등을 지원확대할 방침이며, 특별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3. 다문화사회가 된 대한민국, 그 까닭은 무엇인가?

다문화사회가 된 대한민국, 도대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갑작스러운 도래와 그로인해 파생된 인구감소 및 노동력 수급문제를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과 국제결혼을 통해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인식과 노력을 들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이로 인한 결혼경사현상 및 출산기피현상의 확대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미혼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05년 미혼여성비율이 25-29세는 39.7%에서 59.1%로, 30-34세는 10.5%에서 19.0%로, 35-39세는 4.1%

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참조. 여성가족부 내 “다문화가족과”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에서 7.6%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35-39세 여성의 열 명 중 한명 이상(12.5%)이 현재 미혼이며, 또한 해가 갈수록 결혼 적령기 남녀 비율이 급속도로 벌어져 2014년에는 남성의 약 20% 정도, 즉 남성 10명에 2명 정도는 신붓감을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결혼적령기를 넘긴 독신여성의 많은 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학력수준이 높으며,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합계출산율이 낮은 대도시 지역의 여성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권신장으로 독신여성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Jessie Bernard(1982)가 '결혼의 미래'(The future of marriage)에서 지적한 것처럼 "결혼경사(傾斜) 현상"(marriage gradient)⁹⁾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에코데일리, 2009. 10. 12). 또한, 이와 같은 미혼여성의 꾸준한 증가는 결혼대란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슈브리프 18호는 향후 예상되는 결혼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결혼의식 변화, 다문화가정 포용 등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로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을 주장했다. 2014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결혼대란은 인구학적으로 예측된 현상이고,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그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결혼 준비에서부터 결혼, 결혼 후의 적응에 이르기까지의 서비스를 보다 원만히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갖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상업화된 결혼중개시장의 팽창은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을 조장하고, 확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농촌의 노총각들, 그리고 사별 혹은 이혼한 남성들의 결혼의지와 경제적 부를 꿈꾸는 아시아 여성들의 이주 욕구가 상응하면서 포장만 보고 구입하는 식의 '국제쇼핑결혼'이 시작되었다. 말이 좋아 쇼핑이지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나 쓰는 듯한 적나라한 홍보문구를 내세운 국제결혼중개시장의 팽창은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엄가제공', '도망가면 책임짐', '순종적이고 순결합니다', '부모님 모시기 좋아하는 베트남 여성' 등의 문구로 사람을 사고파는 노예상을 우리 사회는 그대로 묵인해 왔다. 그러다가 다행히 2008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으로 국제결혼에 있어서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허위·과장광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이현정, 2009).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국제결혼중개업법은 결혼이주 여성이 권익보호가 아니라 소비자인 한국 남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 55조에 의하면 "소비자(한국남성)는 사업자(중개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이주여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한국정부는 중개업자에게 돈을 지불한 이주 여성을 위장결혼 사범으로 구속하고, 추방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남성은 여성을 구매했다가 반환이나 환불도 가능한 실정이다(이현정, 2009). 상업적 국제결혼의 알선이 금지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결혼중개행위가 위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적 수요를 감안하여 결혼중개업법이 시행 상 요구되는 위험요인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국제결혼시장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문화가정' 신조어를 발생시키고,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이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다.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보나온 삶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발전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있다. 필자가 유학시절 미국을 여행하면

9) 대개 여성은 남편을 존경할 수 있길 바라므로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남성을 선택하게 되고, 남성 역시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기를 바라므로 자신과 비슷하거나 다소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원하는 경향을 결혼경사현상이라 한다. 여성 지위의 향상은 오늘날 우리사회에 결혼대란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경사현상에 의해 남성들은 최하의 사람들(bottom-of-the-barrel)이 결혼하지 못하고 남게 되며, 여성들은 자신들보다 우월한 상대 남성을 찾지 못한 최상의 사람들(cream-of-the-crop)이 남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서 느낀 점 중에 미국사회가 문화적 다원주의를 보편성을 지닌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인 동시에 인종차별과 소수민족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가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라는 점이였다. 이민자로 시작된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그리할진대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된 지 불과 10년을 넘어선 우리사회에 세계화와 다문화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까지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 우리사회는 다른 모습이나 언어 등이 어느새 어색하거나 이질적이지 않은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며 이미 다가 온 미래이다.

4. 다문화 가정의 아픔 이해하기

(1) 결혼 이주 여성 이해하기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한 집안이 살림을 꾸려나간다. 하지만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우울증이나 외로움에 고통 받고, 단지 돈을 벌어 한국을 떠나겠다는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가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남성들은 단지 결혼만을 생각하고, 이주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결혼관계를 이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의 시작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 없이 시작된 결혼은 지속되는 동안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남편의 경우 결혼의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나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하는 반면, 이주 여성의 경우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엉뚱한 답변이 나오곤 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주체인 결혼이주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가정의 주체로서,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존재적 가치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ethnic-sensitive practice)에 있어서는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Devore & Schlesinger, 1999). 다문화 가정의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첩경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남편(시아머니)의 아내(며느리) 이해하기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상호이해의 벽을 넘지 못해 별거하거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의 이혼은 일반 가정의 부부와는 다르게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 배경과 가치관의 이질성 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며(한국염, 2011), 한국의 부모나 혹은 친척들의 냉담하거나 거부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어서 가족관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 여성을 받아들이는 나이 많은 남편이나 더 나이 많은 시어머니의 경우, 이주여성의 문화를 주변적인 속성의 하위문화로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타문화에 대한 거부 및 부적응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구성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일방적인 한국문화로의 동화가 아닌 한국의 문화를 이주민에게 알리고, 이주민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해하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문화를 창출하는 공존의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가족붕괴의 위기에 처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가장 시급한 것은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편견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심리치유적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알리고, 거부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적 교육도 절실하다. Bochner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특성을 익히는 문화적 배움(culture learning)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문화(second culture)를 배우는 것은 동화의 개념과는 다르게 문화 중심적인(ethnocentric)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Bochner, S., 1982). 모든 문제의 해결정도는 서로간의 이해의 폭에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Lee는 다문화 속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이해하려는 태도인 '열린 마음의 자세(open mind)', 너무 다른 것에 대하여 판단을 미루고 왜 그런지 묻는 '질문(ask questions)', 지식을 넓히기 위한 '교육(education)', 소수자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경험(experience)'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성천 외, 2009: 378에서 재인용).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불만을 키우는 일이 될 뿐이다. 서로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자는 의미이다. 외국인들이 소통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결론을 주장하기에 급급하고 쉽게 좌절하고 짜증을 내게 된다. 반면 한국 사람들의 경우 정확히, 천천히, 그리고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갖게 된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함을 의미한다. 다문화 인종간의 대화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지각과 상대방의 관점에 대한 지각, 그리고 삶 속에서의 효과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량을 강화시킨다. 또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Kavanagh & Kennedy). 설사 서로간의 말이 통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쌍방 간의 동등한 의사소통구조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다문화가정, 아니 다문화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자 원동력을 명심해야 한다.

(3) 낯선 삶 응원하기

타 문화권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와 삶에 적응하기 위해 감수해야하는 노력과 수고는 눈물겨울 정도이다. Oberg에 의해 1960년에 소개되고 그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속 다듬어지고 있는 문화 충격(culture shock) 개념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면 상당할 정도로 당황하게 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Oberg, K., 1960). 이때 획득된 문화의 구성원과 집단들의 포용과 배려, 협조와 공존은 이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자리매김하고 적응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일정 부분 우리스스로가 선택하고 결단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변화이다. 우리자신의 선택을 좀 더 건강하게 지키고,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008년 8월에서 12월 사이 서울과 경기지역 초·중학생 1천7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52.9%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확실하게 부정적 견해를 보인 초·중학생이 12.7%, 중학생이 7.2%로 조사되어 나이가 어릴수록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로 '외모와 피부색이 달라서', '부모님이 싫어하니깐', '다른 친구에게 따돌림 당할까봐'라는 대답이 많았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이 조사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동일어가 아님'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와 혈통이 다르다고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님을,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4) '나 버리기'와 '너 되기' 훈련

다문화 사회에서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다. 내가 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 신발을 벗고, 네 신발을 신어보자.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희망이 있는지, 어떤 절망이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지 경험해 봐야 한다.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탈출하는 '나 버리기'와 '너 되기' 훈련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무관심과 단순한 바라보기가 아닌 실제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 이다.

1) 자발성을 키우기: 자발적으로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동정심의 발로 차원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적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상대와 동일시하기: 커뮤니케이션 기법 중 상대방과 같은 느낌을 찾아가는 페이스(pacing) 기법의 활용을 통해 상대의 움직임과 행동을 따라하는 훈련이다.

3) 상대방의 거울이 되어보기(무의식적 소통하기): 상대방의 거울이 되어 신체적 움직임과 특징을 그대로 반복하는 훈련이다. 이를 통해 무의식적 소통이 가능하며 초기단계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4) 맞장구치기 훈련하기: 흔적내기훈련 혹은 再진술(restatement) 기법으로도 불리며,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진술을 유사한 말로 바꾸어서 표현해주는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 상대방이 한 말의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에 대한 추리를 제시하는 해석(interpreting)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나 버리기: 나를 버린다는 의미는 내가 추구해왔던 가치를 내려놓음이다. 가치란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믿고, 추구하는 것이다.

나를 버려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다문화 교육 분야를 들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은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 강요가 아닌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상호교환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과 호기심, 그리고 흥미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다문화 가정과의 바람직한 관계형성 원칙

(1) 개별화(Individualization)의 원리

개별화란 상대방의 독특한 자질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이원숙, 2008). 개별화의 원리란 인간은 개별적이며, 일반적인 사람 중의 하나가 아니라 개별적인 독특성(uniqueness)을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 쳐우 되어야 하는 인간적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개념은 또한 인간적인 독특성만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상황과 관심도 개별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문제가 이해되고 있다고 느낄 때에만 상대방과 인격적 신뢰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의 성공여부는 상대방에 대한 개별화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관심과 우선순위는 매일 또는 매주일 변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변화에 맞는 접근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Sheafor & Horejsi, 2003).

(2)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의 원칙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보장하는 일은 윤리적인 의무이고, 성공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이다. 사적인 정보나 비밀이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은 본인에게 보호받고 싶은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지켜줄 때, 보다 건강하게 상호관계가 형성, 발전, 유지될 수 있다.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지 못할 상황이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함으로써 보다 진실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강점관점(strength perspective)에 입각한 역량강화(empowerment)의 원리

강점관점은 종래의 병리적, 치료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어 극대화시키는 관점이다. 이는 “병리적 관점”에서 “강점관점”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더불어 “문제의 해결”에서 “도전의 가능성”이라는 문제인식의 변화, 그리고 “과거 지향”에서 “현재와 미래의 지향”이라는 시제의 변동을 의미한다(손산신효진, 2011). 이러한 강점관점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 원조자로 하여금 삶의 가치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주체화하여 개인의 삶이 타인에 의해 구성되거나 조정 받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강점관점에서 개인은 강점과 기질, 재능, 자원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인정되며(손산신효진, 2010), “역량강화”(empowerment)는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강점관점에 입각한 원조과정의 되기 위해서는 원조자에 의한 문제정의, 상황해석, 개입계획 등이 철저히 자체되어야 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상황안의 개별적 존재로서의 피 원조자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는지 클라이언트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강점관점을 통한 당사자 역량강화의 최종목적은 피 원조자의 개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시적인 목적을 넘어, 강화된 역량을 지닌 당사자가 이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생산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¹⁰⁾.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커졌을 때 사람들은 역량강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은 개인적 강점을 발달시킬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역량 역시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외적조건과의 힘의 불평등· 힘의 부족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부정적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되며, 이것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적 평등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수용(Acceptance)의 원리 및 비심판적 태도(Nonjudgmental attitude)의 원리

10) 역량강화(empowerment)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자원을 발견,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의식적인 과정이다. 피 원조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전제조건으로 첫째, 피 원조자의 환경 속에 이들이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피 원조자는 이러한 대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실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소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용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 바람직한 성질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건설적 및 파괴적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를 지각하고 다루어 나가는 원칙이다(김기태 외, 2007). 즉 수용은 상대방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을 의미하며,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개인적인 우정의 차원이 아닌, 인간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따뜻함(warmth), 수용(acceptance), 그리고 이해(understanding)를 보여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용의 원리는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규범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존중과 관심을 가질 때만이 표현되어진다. 대상자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은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Sheafor & Horejsi, 2003). 물론 수용이라는 의미가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들의 모든 행동을 찬성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은 분명하다(Piccard, 1988).

비심판적태도는 상대방이 가진 문제의 발생 원인이 그 사람의 잘못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배제하는 것이다(Piccard, 1988). 사실상 인간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인간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5)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원리

모든 인간은 자기의지(self-will)가 있으며, 자신 스스로 결정하고자하는 욕구가 있고, 동시에 누구나 자기결정능력을 지니고 있다. 다수자의 의견이 주가 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제한되거나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오해받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이러한 묵살과 오해는 심지어 소수자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수자들과의 관계를 일상의 권력관계로 인식하며, 일상의 생활 속에서 다수자들과의 상호작용 및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나 행동에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반영시키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강조한다. 이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 좀 더 확대하면, 민주사회에서는 민족 집단과 이민자 집단이 국가의 시민문화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박천웅, 2012).

남아프리카 장애인 운동계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당사자 배제불가의 원칙을 표명하는 슬로건인 '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오늘날 장애인자립운동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자 사회적 소수자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이러한 당사자배제 불가의 원칙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일은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점과 성장의 잠재력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신념이 존중될 때 피원조차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대상자 자신들보다 그들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인간의 심리나 기능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대상자들 자신이 스스로의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Sheafor & Horejsi, 2003).

III. 나가며

대한민국은 이제 외국인 결혼이주자들의 출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이성미, 2012). Ruffin이 말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동자들(workers)이었으나 온 것은 인간들(human beings)” 이었다(엄한진, 2011에서 재인용). 이 말의 의미는 노동이민이나 결혼 이주여성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출산의 수단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권문제, 복지문제, 사회적 갈등 등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한국인의 힘과 한국적인 것의 고집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세계화도,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도 이루어 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인 세계화를 고집하고 있다. 우리가 그 동안 익혔던 문화와 관습을 고집한 채, 현재의 다문화 가정을 경험했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격한 반감(편견),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꼬리표(고정관념), 그리고 그들과의 교류거부(차별)로 나타난다(Brislin, R. etc., 1986).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어떻게 하면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동화될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필요한 노동력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등 일방적인 입장의 틀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과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자세, 그들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감을 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가진 문화의 다양성을 주목하고 열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서울의 거리에 서구 선진국의 백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계화’를 생각하는 우리지만, 동남아 혹은 흑인, 서남아시아의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다문화’라고 부르는 이중적이고, 일방적인 무한이기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세계화 없이는 한국의 발전이 없다’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다문화 없이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동반자적 신념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제언으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기 위한 당면과제와 제언을 사회복지적 측면과 목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적 과제

(1) 사회복지적 과제

사회복지학적 관점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 역할을 들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가 빈번한 현실 속에서 이들을 위한 옹호자(Advocate)로서 그들의 충분한 권리의 보호, 신장,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미국의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법률의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과 민간 조직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개자(Broker)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관, 시민단체, 지방정부, 학교 등과 연계하여 ‘외국어 교육’, ‘한글 교육’, ‘직업 훈련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교육자(Educator)로서의 역할이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상담 및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 혹은 기획자(Expert or Planner)로서의

역할 역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 ‘親다문화 사회복지 실천(Ethnic-sensitive social work practice)’을 개설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2)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제언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과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발굴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연계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 여성을 전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적과 언어, 개인사 등을 고려한 개인의 개별적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복지 원칙에서의 개별화 원리에 해당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에게 지역주민, 친척, 남편과의 의사소통이나 문화적인 정체감을 한 개인의 삶에 만족을 높여주는 주요한 자원이므로 이들을 위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문화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가 시작된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한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적·시대적 요구이다(최명민 외, 2009).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마련과 가족 상호간의 이해증진 노력, 이웃과의 교류관계 향상 등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원만한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문제해결을 합리적으로 이끌며, 이를 위해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무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생활 상담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김승권, 2010).

넷째, 결혼 생활은 한 쪽의 적응, 노력과 희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 가정 관련 서비스는 대부분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주외국인들의 문화나 언어 등을 배워 서로가 동등한 상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빠가 이주민 엄마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는 모습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아빠 나라인 한국 문화만이 아니라 엄마 나라의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엄마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야말로 다문화 자녀들에게 가장 확실한 자산이다. 또한 이주 여성들이 남편과의 여가시간 공유 등을 통해 친밀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에게 모국을 떠나기 전의 준비(교육)가 필요하다. Klineberg에 의하면, 다른 문화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기 전의 경험(predeparture experience)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준비 정도는 타 문화권에서의 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Klineberg, 1982).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떠나기 전에 한국의 현황- 정치경제문화 그리고 간단한 역사-에 관하여 현지에서, 즉 그들의 나라에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 교과과정에 특히 사회복지학과나 심리학과 등에 다문화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¹¹⁾ 다문화 가족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선생님이나 보육교사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준 사건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이성미, 2012).

11) 미국의 모든 사회복지대학원에는 ‘ethnicity’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2. 다문화가정과 함께하기 위한 목회적 제언

사회복지적인 관점에 더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원칙과 주의점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성 확보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교회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역을 해왔지만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어 지도교육, 의료서비스, 노동문제 상담, 신앙상담 및 성경공부 등 현재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다문화가정 사역의 담당자 및 실무자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의 확보는 물론 사역대상자들의 고유한 문화와 개별적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열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지속성 유지이다. 다문화 가족사역에 있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어내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뛰어들거나, 하나의 목회 프로그램으로 한시적 운영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적 계획과 충분한 준비 없이 한글공부방을 개설하는 교회가 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방향성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교회 교육은 소수자의 적응을 위한,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류였다. 소수자의 한국 사회 내의 적응과정을 돕는 적응교육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방적 관점을 지양하고, 동화가 아닌 공존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연계성 확보이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역은 교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중앙부처, 지자체, 타 교회, 민간 복지단체, 인권단체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다차원적인 협력체제 하에서 각자의 장점과 특성을 최적화 시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회 내 교육이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기존의 교인들에 대한 교육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본적인나마 사역 대상자 국가의 문화를 배우고, 다문화 사역을 위한 참여의 동기를 높이는 교회 내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가지가 다문화가족 자녀와 부모를 위한 교회 교육이다. 한국의 문화, 복지제도, 가족제도, 종교에 대한 교육을 교회가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 예배, 대안학교, 부부학교 프로그램 운영, 친정 만들어주기, 공동체모임 만들어주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부모학교 프로그램, 언어교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1. 한국 자료
김기태, 김수환, 김영호, 박지영(2007).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공동체.
김성천 외(2009). 『사회복지학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학지사.
김승권(2010), “다문화가족 실태와 사회복지지원체계 확립 필요성” 『사회복지』 여름호(통권 185호).
엄한진(2011). 『다문화 사회론』, 서울: 소화.
이성미(2012). 『다문화 정책론』, 서울: 박영사.
이원숙(2008).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학지사.
이현정(2009).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 서울: 소울메이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09). “성비불균형에 따른 결혼대란의 대비”. 『이슈브리프』 제18호.
박천웅(2012),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선교와 신학』 29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 10). “2010년 9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0). 「농어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 매뉴얼」. 농어촌다문화가족지원사업.

손신, 신효진(2010).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찰”. 「신학논단」. 제59집.
 (2011). “장애인, 진정한 자립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강점바라보기와 역량강화”. 「장신논단」. 제41집.
 이학춘(2010. 2).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정책 연구포럼 창립기념토론회.
 최명민 외(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한국연(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 여름호(통권 189호).

2. 외국 자료

Brislin, R. etc.(1986), Intercultural Interactions: A Practical Guid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Bochner, S.(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cross-cultural relations” in Bochner, S(ed), Cultures in Contact: Studies in Cross-cultural Interaction, Oxford: Pergamon.
 Devore, Wynetta & Elfriede Schlesinger(1999), Ethnic-sensitive Social Work Practice, St. Louis: The C. V. Mosby Company.
 Kavanagh, Kathryn & Patricia Kennedy(1992),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Klineberg, O(1981), “The role of international university exchanges” in Bochner, S. (ed.), The Mediating Person: Bridges between Cultures, Boston, MA: Schenkman.
 Oberg, K(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in Practical Anthropology, Vol. 7.
 Piccard, B.(1988), Introduction to Social Work, Chicago, Ill: The Dorsey Press.
 Sheafor, Bradford & Charles Horejsi(2003),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Social Work Practice, Boston, MA: A & B.

3. 인터넷 사이트

국무조정실(2006. 10. 5).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가구방문(www.pmo.go.kr).
 기획재정부(2010. 9. 6).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www.mof.go.kr).
 법무부(2009. 7. 20). 상반기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수료자 304명 배출(www.lawtimes.c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에코데일리(2009. 12. 10). “2014년, 남성 약 20%가 신봉감 찾기 어렵다”(www.ecolover.co.kr).
 통계청. (2006.11). 장래인구 추계결과(www.kostat.go.kr).
 . (2009. 12). 2008년 생명표(www.kostat.go.kr).
 . (2010. 3. 15). 2009년 혼인통계 결과(www.kostat.go.kr).

Abstracts

The Approach of the Social Welfare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Mann Shik Lee(PCTS Graduate School of Ministry)

Statistically once the number of immigrated population reaches over five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t is usually called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 to 2010 government statistics, the proportion of foreign born population in Korea is about 2.3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During the last thousand years, Korean society has enjoyed its identity and tradition based on the myth of the 'single ethnicity.' However, this myth is no longer the basis for integration and consolidation of our society.

In today's Korea, the challenges and problems directly related to multiculturalism issues is not that of future which is coming to, but of future which is already happening. Those challenges and problems, caused by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and foreign born spouses, the improvement of women's social status,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matchmaking businesses, are likely to increase community problems not only between existing residents and newly immigrated residents. but family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within multicultural famil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some factors shaping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ir problems, and discusses possible future policy directions and suggestions. Together, some important principles and guidelines is reviewed in reference to missionary work targeting multicultural families.

* Key word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work mission.